meritz Strategy Dai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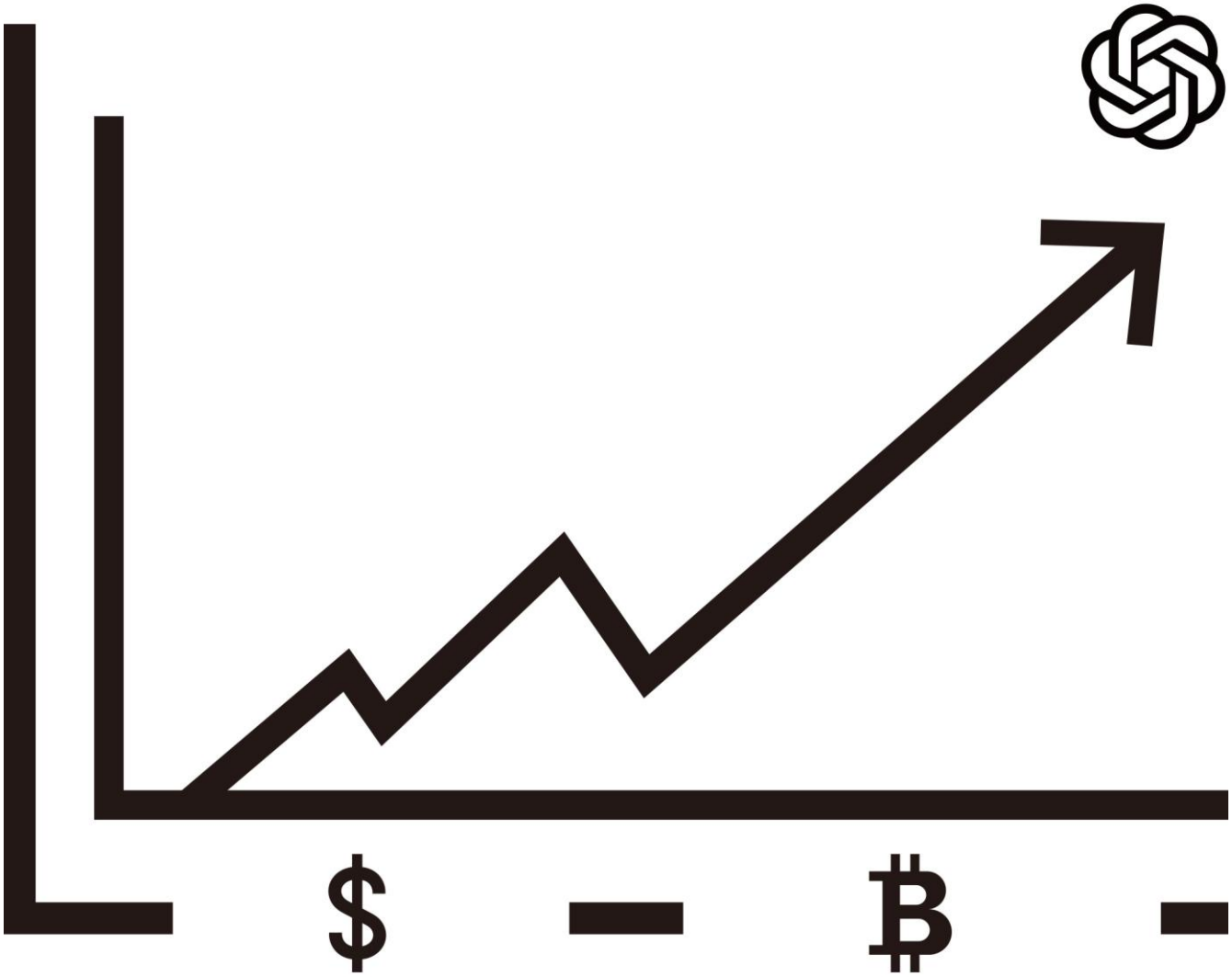
전략공감 2.0

2026. 2. 26 (목)

Strategy Idea
26년 양회 Preview: 본토 테크 + 시크리컬

오늘의 차트
약달러와 EM 증시

칼럼의 재해석
일본 민간 우주 기업의 부상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

meritz 메리츠증권

Strategy Idea

26년 양회 Preview: 본토 테크 + 시크리컬

글로벌 투자전략 - 신흥국
Analyst 최설화
xuehua.cui@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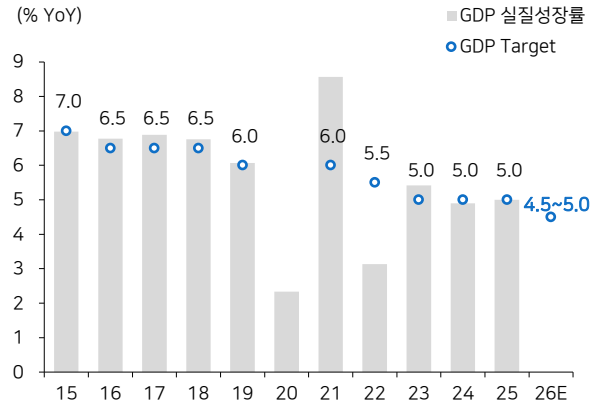
- ✓ 26년 중국의 정책은 질적 성장을 위한 특정 전략 분야들을 겨냥한 타겟팅 부양 중심
- ✓ 테크: 산업 고도화 전환을 위한 지원책이 반도체 등 하드웨어 중심 → 과창50 〉 항셍테크
- ✓ 시크리컬: GDP 성장률 목표치 하향 조정 및 반내권 강화 시 양회 이후 가격 상승세 지속 가능

2026년 양회 컨센서스와 관전포인트

중국의 양회(정치협상회의·전국인민대표대회) 시즌이 돌아왔다. 3월 4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양회 핵심 일정은 1) 3월 5일의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에서 공개될 2026년 국정운영 계획과 2) 3월 15일 전후로 확정될 '제15차 5개년 규획' 최종안이다. 특히 올해는 장기 국가 전략인 5개년 계획 수립이 주요 어젠다인 만큼, 시장의 관심은 예년보다 '15.5 규획'에 더욱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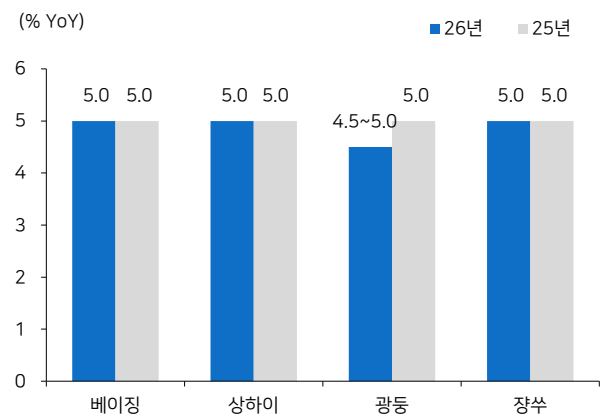
1. GDP 실질 성장률 목표와 물가: 시장 컨센서스는 전년 대비 0.5%p 하향 조정된 4.5~5.0% 구간에 형성되어 있다. 이는 광둥과 저쟝 등 주요 경제 거점 지방정부들이 목표치를 일제히 낮춰 잡은 흐름을 반영한 결과이다. 다만, 전국의 성장률 목표와 궤를 같이해온 베이징과 상하이 등 핵심 도시들이 여전히 5.0% 내외의 목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종 목표는 3월 5일 전인대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그림 2).

그림1 26년 GDP 성장률 목표 컨센서스: 4.5~5.0%



자료: 국가통계국,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전국 GDP 목표 선행 지역들은 여전히 5.0%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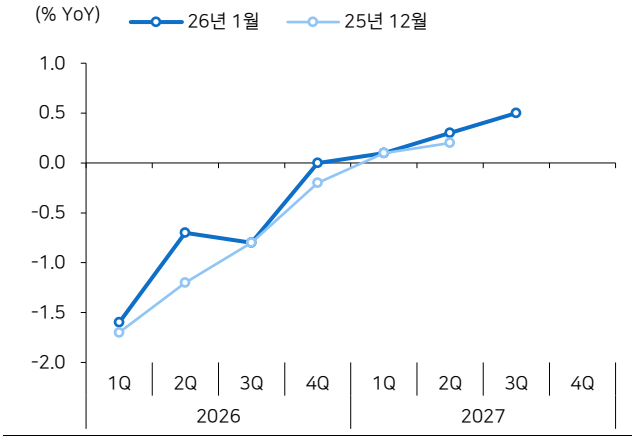


자료: 각 지방정부,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올해 중국 경제의 핵심은 실질 성장률의 수치 자체보다 명목 성장률의 반등 여부에 있다. 작년 7월부터 정부 정책 기조가 과도한 출혈 경쟁을 억제하는 반내권(反內卷)과 합리적인 물가 회복으로 선회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 실질 성장률 목표가 하향 되더라도, 이는 과거 공급 과잉을 야기했던 물량 밀어내기식 전략이 약화됨을 의미한다. 이는 기업의 이익 개선과 체질 강화를 동반하는 질적 성장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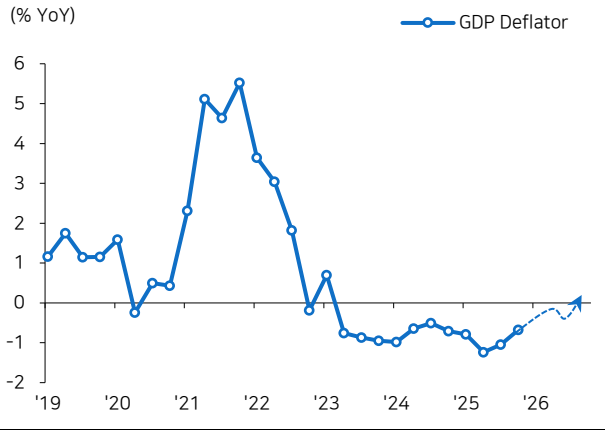
이러한 기대는 중국의 생산자물가(PPI) 전망치에 반영되고 있다. 지난 2년간 하향 곡선을 그리던 것과 달리, 올해는 연초 대비 PPI 전망치가 소폭 상향 조정되는 모습이다(그림 3). 올해 전인대에서 예상대로 성장률 목표를 소폭 하향 조정하고, 공급과잉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구체화한다면 중국 PPI는 업사이드 리스크가 존재한다. 이 또한 중국의 디플레이션 탈출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며, 한국 주식시장의 철강, 화학 등 경기 민감 산업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그림 4).

그림3 **중국 PPI 전망치: 지난 2년과 달리 소폭 상향 조정**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중국 GDP Deflator 하락폭 축소**



자료: 국가통계국,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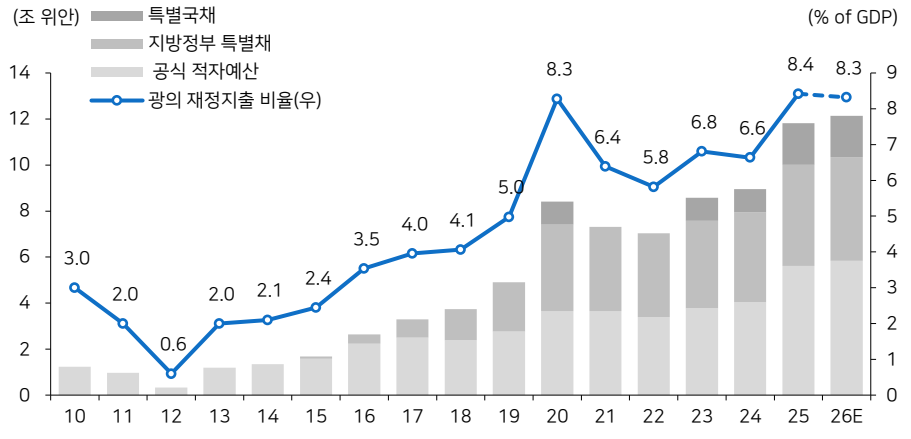
2. 재정과 통화정책: 전략적 속도 조절과 선별적 지원

내수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26년에도 적극적인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올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전년과 동일한 -4.0%를 유지하고, 특별국채 역시 전년 수준인 1.8조 위안 규모로 발행될 전망이다. 지방정부 특별채는 전년 대비 0.1조 위안 증액된 4.5조 위안을 투입하여 인프라 투자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절대적인 재정 지출 규모는 작년과 유사한 수준에서 관리되며 경기 하방 압력을 방어하는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다.

다만 26년 GDP 대비 광의의 재정지출 비율은 8.3%를 기록하며, 25년(8.4%) 대비 소폭 하락할 것으로 관찰된다(그림 5). 이런 재정 강도의 미세 조정은 대외 환경 개선에 따른 전략적 속도 조절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 협상이 1년간 유예됨에 따라 수출 경기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고, 중국은 타이트한 재정상황에서 무리한 부양보다는 대외 여건의 호조를 활용하여 재정 여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판단된다.

통화정책은 연간 1~2회의 지준율 및 금리 인하가 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전면적인 완화보다는 맞춤형 정책 수단을 통한 특정 분야 지원이 강조될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 1월 인민은행(PBoC)의 완화 정책은 경제 전반의 유동성 공급 확대가 아닌, 전략 섹터를 대상으로 금리를 낮춘 재대출 한도 증액의 형태를 취했다.

그림5 **26년 중국의 광의의 재정지출은 GDP 대비 8.3%로 25년(8.4%)에서 소폭 하락 예상**



주: 26년 중국 GDP 명목성장률을 4.0%로 가정
자료: 재정부,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3. 내수 확대: 중요도 상승했으나, 효과까지 시간 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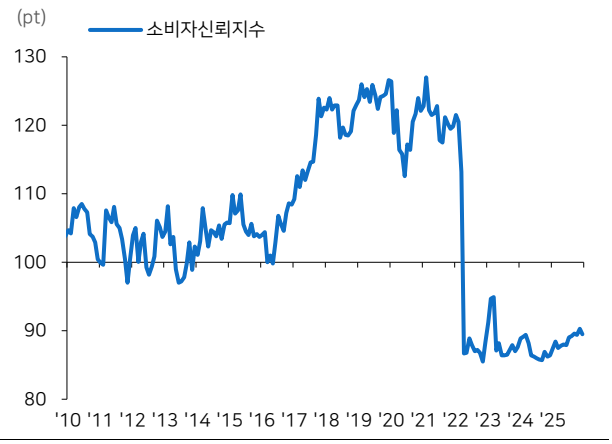
내수 활성화는 올해 중국 정부의 1순위 정책 과제이다. 팬데믹 이후 위축된 소비자 신뢰지수가 유의미한 반등을 보이지 못하면서 디플레이션 고착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림 6). 이에 중국은 단순한 부양을 넘어 경제 전반의 심리 회복을 위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예상되는 내수 확대 전략은 1) 중앙정부 지출 중심의 고정자산투자 확대와 2) 서비스 소비 중심의 정밀한 부양책 결합으로 요약된다. 양회 종료 이후 중국은 전력망 고도화, 수력 발전 등 국가 전략 인프라 프로젝트에 가용 재원을 투입함으로써 경기 하방 압력을 방어하는 '안전판' 구축에 주력할 전망이다(그림 7).

다만 시장의 실질적인 관심은 민간 소비의 자생적 회복 여부에 쏠려 있다. 정부는 금리 보조금 확대, 서비스업 생태계 육성, 이구환신 연장 등 다양한 카드를 검토 중이다〈표 1〉. 그러나 올해 이구환신 지원 예산이 전년(3,000억 위안) 대비 감소한 2,500억 위안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고,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실질 성장률을 하회하는 구조적 한계를 고려할 때, 상기 조치들이 실제 소비 진작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회의론은 여전히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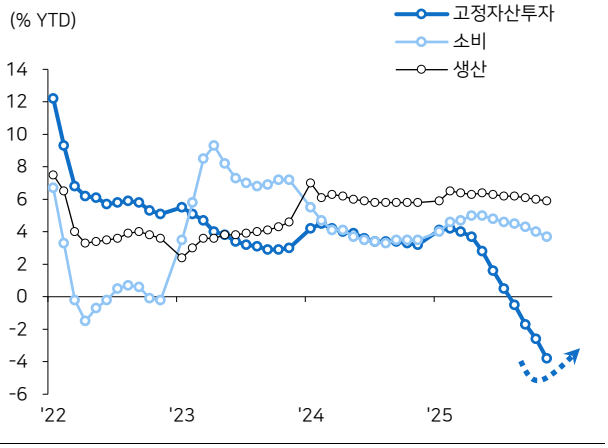
결국 내수 회복의 성패를 가를 핵심은 부동산 자산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는 정책 기조가 이번 전인대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될 지에 달려있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재고 매입 등 여러 방안이 거론 되어 왔지만 실제 집행 속도는 시장의 기대를 밑돌았다(그림 11). 그러나 올해 합리적인 물가 상승을 견인하겠다는 정책 목표로, 부동산 경기의 추가 둔화를 방어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 관련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6 **중국 소비자신뢰지수: 아직 유의미한 반등 부재**



자료: 국가통계국,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양회 이후 중앙정부 지출 중심으로 투자 반등 꾀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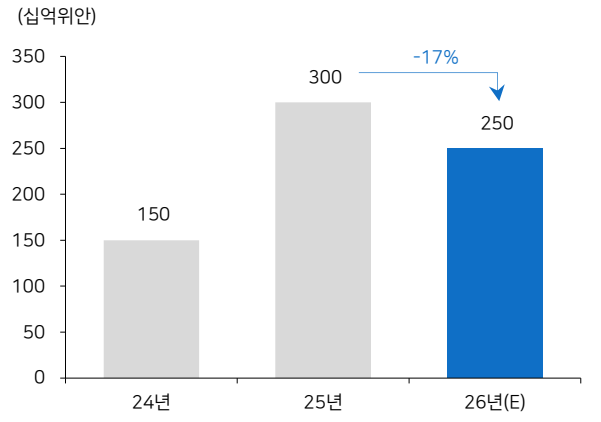
자료: 국가통계국,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1 중국에서 발표된 내수 소비 부양 정책: 25년의 기조가 26년에도 지속

	분야	2025년	2026년
1	가계 소비대출 이자 보조금	건당 한도 500위안	건당 한도 3,000위안 상향 조정
2	자영업자 대출 이자 보조금	대출 한도 100만 위안	대출 한도 1,000만 위안 상향 조정
3	이구환신 보조금	3,000억 위안	2,500억 위안(E)
4	설비 교체 보조금	2000억 위안	2,000억 위안(E)
5	면세 정책 개선	면세 기준 하향, 면세품목 확대 등	중국 입국 규제 추가 완화
6	서비스 소비 지원 확대	육아 지원금, 지역별 축제 개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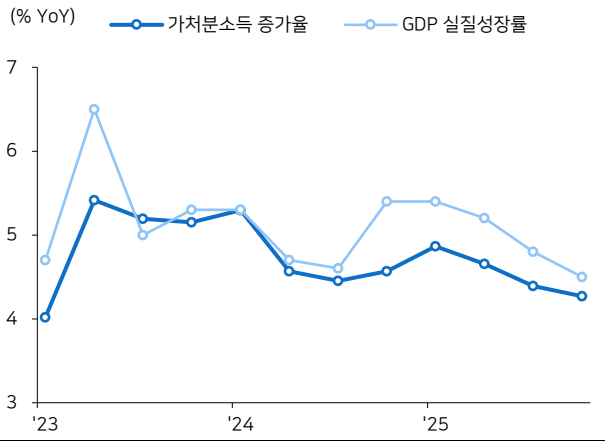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26년 이구환신 보조금은 전년대비 17% 감소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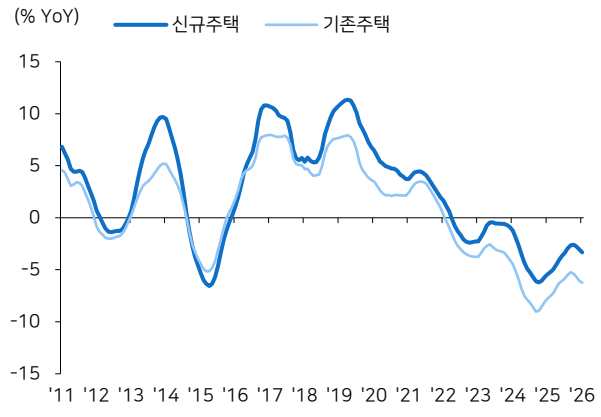
자료: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리오프닝이후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실질성장률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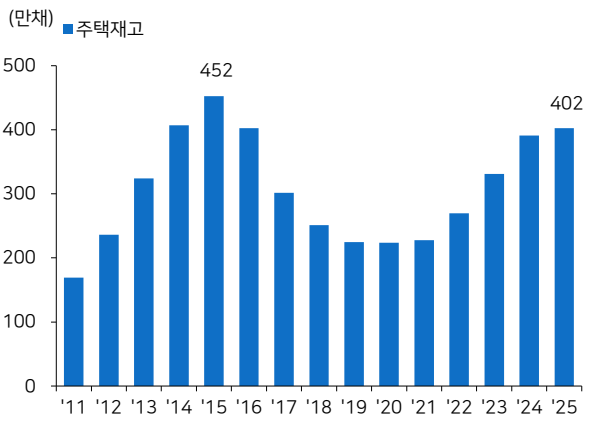
자료: 국가통계국,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중국 신규주택과 기존주택 가격 추이



자료: 국가통계국,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중국의 공식 주택 재고: 25년 계속 증가



주: 가구당 면적을 100m2로 가정하고 계산
자료: 국가통계국,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4. 산업 정책: 기술 자립과 탄소 중립 지속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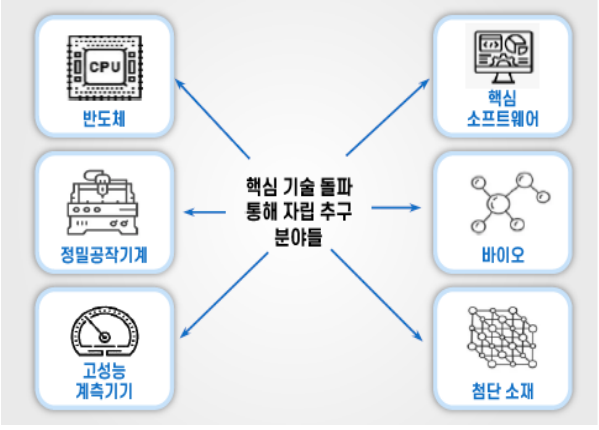
15차 5개년 규획은 이번 전인대의 핵심 어젠다로, 2035년 중국이 사회주의 현대화 목표 실현을 위한 중기 로드맵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

1) 첨단산업과 기술 자립: 2030년까지 중국의 최우선 과제는 기술 자립과 첨단 제조업 육성이다. 미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중국의 4대 전략 신흥산업과 6대 미래산업은 미국의 육성 산업과 궤를 같이 한다(그림 12). 연초 발표된 주요 지방정부의 5개년 발전 전략에서도 AI, 자율주행, 신소재, 휴머노이드로봇, 바이오 등 신산업들의 적극적인 추진이 확인되고 있다〈표 2〉. 특히 공급망 자립도 제고와 핵심 부품/소재 국산화는 단순 산업 정책을 넘어 국가 안보 전략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지속성이 높다. 반도체 등 아직 국산화 비중이 낮은 산업부터 빠르게 추진될 전망이다.

그림12 15차 5개년 규획기간 4대 전략산업과 6대 미래산업

자료: '15차 5개년 규획' 초안,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3 핵심 기술 자립을 추구하는 분야들



자료: '15차 5개년 규획' 초안,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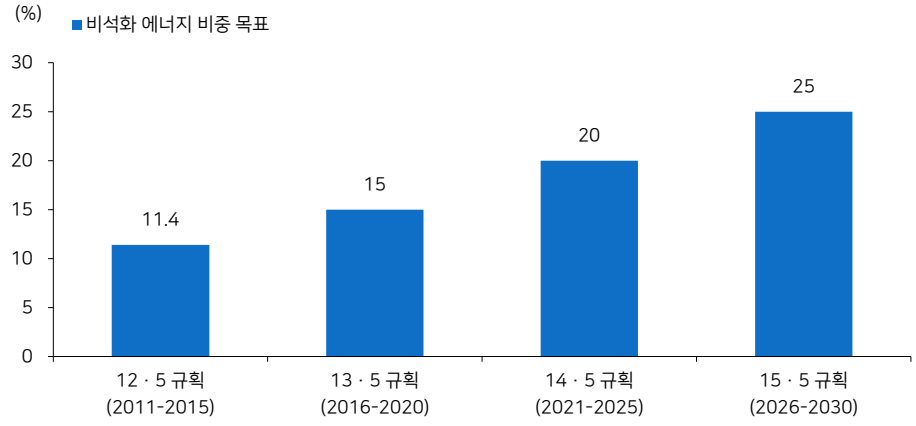
표2 26년 주요 지방정부의 15차 5개년 산업 육성 계획

주요 지역	전략적 산업 (중점 추진)	미래산업 (육성)
베이징	AI, 디지털경제	6G, 양자컴퓨팅, 바이오
상하이	반도체, 바이오, AI	6G, 양자컴퓨팅, 바이오
광둥성	신에너지, 신소재, 자율주행, 휴머노이드로봇	6G, 뉴럴링크, 유전자치료
장쑤성	신에너지, 신소재, 자율주행, 첨단장비	반도체, 정밀기계, 산업용 S/W
저장성	신소재, 신에너지, 반도체, 저공경제, 바이오	휴머노이드로봇, 양자컴퓨팅, 뉴럴링크
허베이성	AI, 데이터센터	디지털경제
스촨성	신에너지, 신소재, 바이오	6G, 양자컴퓨팅, 수소/핵융합
안후이성	반도체, 전기차, 첨단장비	Embodied AI, 뉴럴링크
후베이성	AI, 자율주행	양자컴퓨팅, 바이오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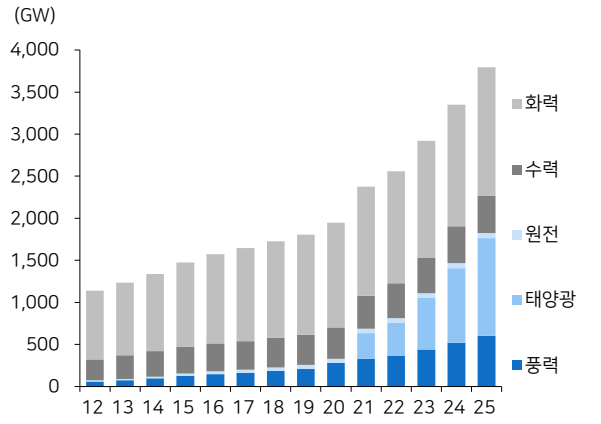
2) 탄소 중립 추진: 중국은 2030년에 탄소 배출량 정점(Peak out), 2060년에 탄소 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15차 5개년 규획 기간의 마지막 해는 탄소 배출량 정점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해이다. 이를 위해 15차 5개년 규획에서 비화석 에너지 사용 비중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14). 이는 신재생·ESS·전력망 투자 확대를 의미하는 동시에 철강, 화학 등 전통 산업에 대한 탄소 배출 규율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공급 제약 요인이 강화되는 산업에서는 가격 안정 또는 상승 압력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림14 **2030년까지 중국의 비석화 에너지 사용 비중을 25%까지 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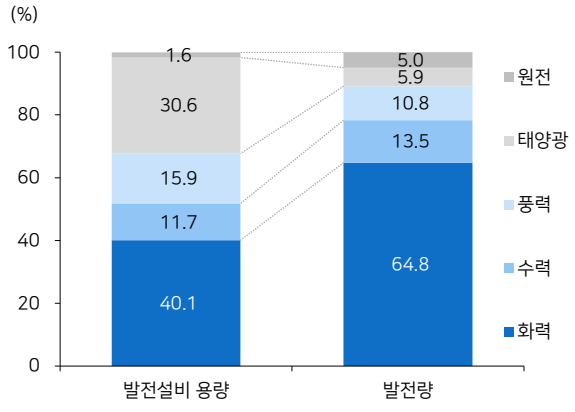
자료: 국가에너지국,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5 **중국의 발전설비 용량 구성: (풍력+태양광) 설치 급증**



자료: Wind,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6 **중국 발전설비 용량 vs. 실제 발전량 비중 분포 비교**



자료: 국가통계국,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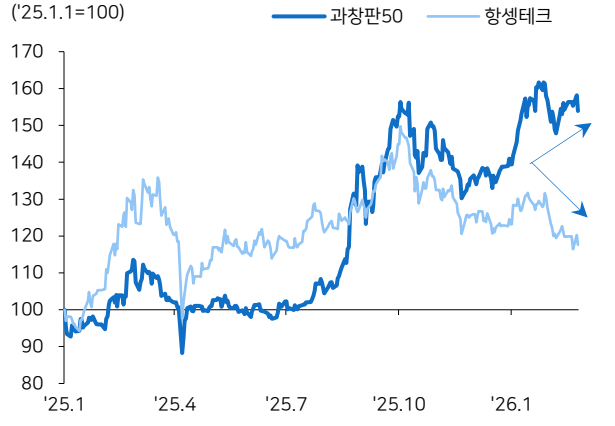
투자전략: 본토 테크 + 시크리컬

춘절 연휴 이후 개장한 중국 주식시장은 3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예산안에서 드러날 정부 부양책의 구체적인 형태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정책 기조를 살펴보면, 중국 정부의 명확한 방향은 경제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보다 특정 전략 분야를 겨냥한 '정밀 타겟팅 부양책(Targeted Stimulus)'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투자 전략 역시 정책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산업을 선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유효해 보인다.

정부의 산업 고도화 지원 정책이 반도체, 신소재, 기계 등 하드웨어 중심이라는 점은, 소프트웨어 비중이 높은 홍콩 증시보다 하드웨어 제조 비중이 높은 본토 증시(과창판 50)의 정책 수혜가 더 클 것임을 의미한다. 올해 상반기 항셍테크 지수보다 본토의 과창50(Star50)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초과 수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그림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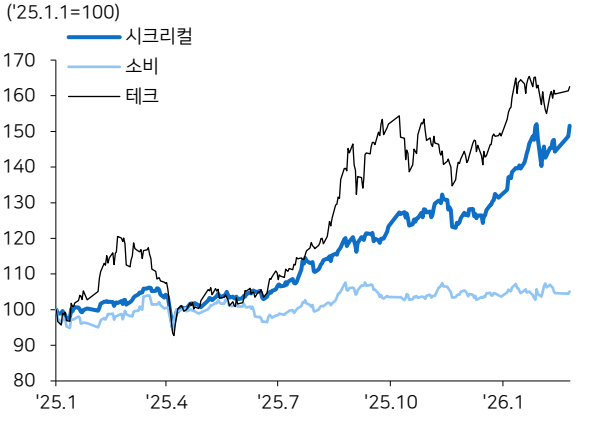
한편 시크리컬 업종의 변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초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귀금속 및 비철금속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 내에서도 '반내권' 시행으로 신규 설비 증설이 제한됨에 따라 일부 화학제품과 유리 등 원자재 가격이 반등하고 있다. 만약 이번 양회에서 1) 성장률 목표를 하향 조정하고, 2) 탄소 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공급 과잉 억제 기조를 강화한다면 공급 축소에 의한 가격 상승 추세는 양회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양회에서 공급 측면의 구조적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한다.

그림17 **차이나 테크: 과창판50 〉 항셍테크**



자료: Wind,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8 **공급 축소 정책 발표된다면 시크리컬 강세 지속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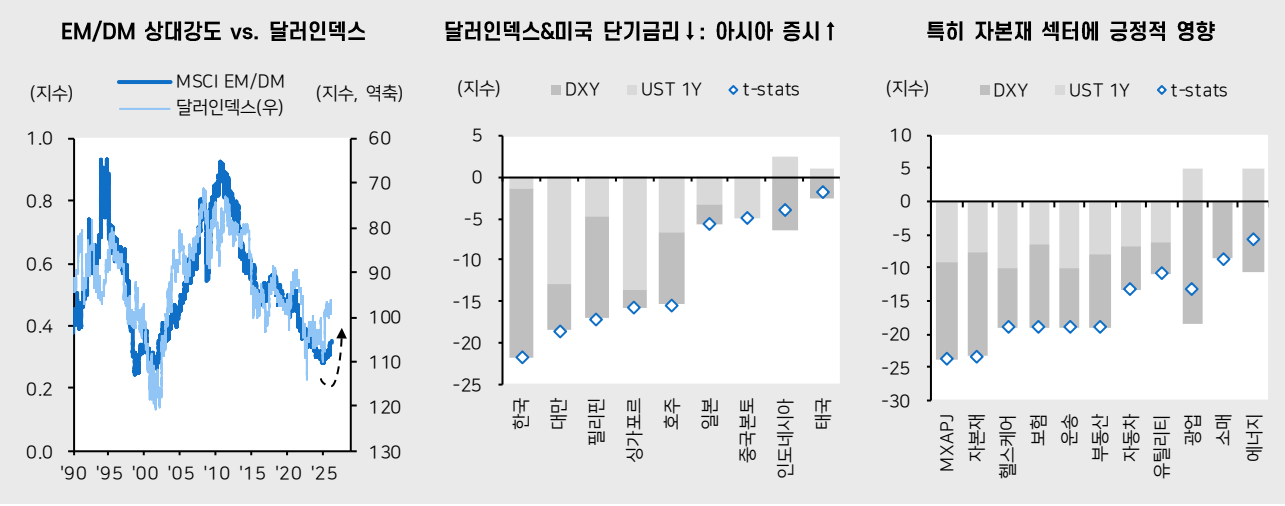


자료: Wind,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오늘의 차트

박민서 연구원

약달러와 EM 증시



자료: Bloomberg, FactSet, Goldman Sach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MSCI EM/DM 상대강도가 2025년 연초 이후 반등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달러인덱스가 2025년 연간 -10.08% 하락하며 1985-1987년(플라자합의)과 2002-2003년(닷컴버블)을 제외하면 낙폭이 가장 컸다는 점과 연관이 있다. 일반적으로 약달러가 나타나면 금리 경로(할인율 하락 및 밸류에이션 확장), 유동성 경로(달러 조달 부담 완화 및 신용공급 확대) 등을 통해 신흥국 자금 유입이 강화된다. 또한 해당 시기는 EM 자산의 상대적 강세를 동반하는 경향이 있다.

아시아 주요 국가별 대표 주가지수(자국통화 기준)의 3개월 수익률에 대한 달러인덱스(DXY)와 미국 단기금리(UST 1Y)의 통계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진행한 결과, 특히 약달러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t-stats은 해당 변수와의 관계가 우연이 아닐 확률이 얼마나 낮은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즉 수치가 (-)이면서 그 절댓값이 크면 구조적으로 관계성이 높다고 풀이할 수 있는데, 한국이 -22로 유의성이 가장 강했고 대만이 -18로 그 다음이다.

동일한 방법을 일본 제외 아시아태평양 주가지수(MXAPJ)의 하위 섹터에 적용했을 때, 자본재 섹터가 -24로 가장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났고, 운송 -19/부동산 -19/자동차 -13/광업 -9 등 시클리컬 업종에서 대체로 약달러 수혜가 확인되었다.

실제로 올해 1월 한달 간 선진국 주식형 펀드에 140억 1,700만 달러가 유입된 반면 신흥국 주식형 펀드에 254억 9,400만 달러가 유입되었고, Bloomberg EM Capital Flow Proxy 지수는 2월 11일 198.5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글로벌 경기 회복 및 미국 추가 금리인하 등으로 리플레이션형 약달러 기대가 이어지면, 아시아 증시, 특히 한국/대만 및 자본재에 우호적인 환경은 지속될 전망이다.

칼럼의 재해석

박건영 연구원

일본 민간 우주 기업의 부상 (The Space Review)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과거 경제안보담당상 시절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의 운영 방식을 개정해 민간 우주 기업의 성장에 시동을 걸었다. 10년 1조엔 규모의 우주 전략 기금이라는 실탄과 중의원 의석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며 방아쇠를 쥐게 된 지금, 일본 우주 산업에 관심을 가지기 좋은 시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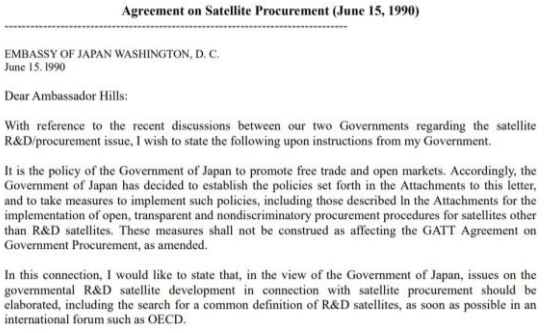
우주 산업의 상업화를 부차적인 문제로 여기던 일본은 큰 비효율을 겪었다. 그러나 2008년 '우주 기본법'을 제정하고 세부 산업에 대한 정책들을 발표하며 민간 기업들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민간 기업들은 정부의 도움에 힘입어 외형 성장뿐만 아니라 미국과 국가 간 전략적 연결고리로 작용하기에 이르렀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다양한 계획에 참여하고, 최초의 비 미국인 달 착륙자로 일본인 우주 비행사 두 명이 선정됐다. 대한민국 역시 법률 개정을 통해 민간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며, 그 결과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정책의 수혜자에서 주도자로

2월 8일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자민당이 전체 465석 중 3분의 2 이상인 316석을 확보하며 대승을 거뒀다. 다카이치 총리는 2023년 경제안보담당상 시절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JAXA의 운영 방식을 학술 중심에서 민간 기업에 대한 투자 주체로 개정했다. 또한 우주 전략 기금을 설정해 우주 관련 벤처 기업, 연구소 등에 10년간 1조엔 규모의 지원금을 확보했다. 트럼프 2기 집권 초기와 유사하게, 일본 우주 산업에 대해 관심을 가질 좋은 시기이다.

1980년대 일본 우주 산업은 정부 주도 국산화 정책을 추진하며 미국산 위성보다 비싼 위성들을 생산하도록 지원했다. 미국은 무역 흑자를 유지하던 항공우주 부문을 보호하고자 인공위성 연구 개발 및 조달 정책에 대한 교환각서를 체결, 일본의 국내 조달 제한을 철폐했다. 발사체 만큼은 독자 개발하고자 했던 일본은 상업화를 부차적인 문제로 여겼다. 그 결과 H-II 로켓 발사 비용이 서방 유사 로켓 대비 두 배 이상에 달하는 결과를 낳았다. 불분명한 정책 환경, 작은 시장 규모 등 역풍에 직면한 일본 우주 산업은 2008년 '우주 기본법' 제정을 통해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림1 인공위성 연구 개발 및 조달 정책에 대한 각서



Agreement on Satellite Procurement (June 15, 1990)

EMBASSY OF JAPAN WASHINGTON, D. C.
June 15. 1990

Dear Ambassador Hil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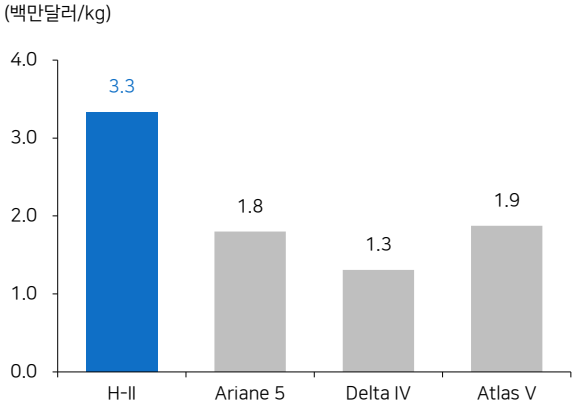
With reference to the recent discussions between our two Governments regarding the satellite R&D/procurement issue, I wish to state the following upon instructions from my Government.

It is the policy of the Government of Japan to promote free trade and open markets. Accordingly, the Government of Japan has decided to establish the policies set forth in the Attachments to this letter, and to take measures to implement such policies, including those described In the Attachments for the implementation of open, transparent and nondiscriminatory procurement procedures for satellites other than R&D satellites. These measures shall not be construed as affecting the GATT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as amended.

In this connection, I would like to state that, in the view of the Government of Japan, issues on the governmental R&D satellite development in connection with satellite procurement should be elaborated, including the search for a common definition of R&D satellites, as soon as possible in an international forum such as OECD.

자료: JAXA

그림2 글로벌 발사체 비용 비교



자료: 언론,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일본의 우주 기본법은 일본 내 비정부 우주 활동을 위한 근본적인 토대를 마련한 법률이다. 복지 향상, 안보, 민간 육성 등 5 대 원칙의 범주 하에서 우주 개발 및 사용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촉진, 세금 및 재정 조치를 장려한다.

우주 기본법을 토대로 2021 년에는 '우주 활동법'과 '우주 자원법'이 제정되며 세부적인 각 산업 분야를 지원하게 되었다. '우주 자원 탐사 및 개발을 위한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우주 활동법)'은 우주 발사 및 위성 제어라는 두 가지 기본 활동에 대한 허가 체계를 수립한다. 상업 주체에 의한 우주 자원의 이용 및 소유를 장려하는 '우주자원 탐사 및 개발 사업 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우주 자원법)'을 제정하며 미국, 룩셈부르크, UAE 에 이어 네 번째로 관련 법률을 마련한 국가가 되었다. iSpace 는 최초로 이 법의 허가를 받은 기업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달 표토를 수집하고 NASA 에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다.

일본 정부는 법률 외에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민간을 지원하고 있다. 내각부가 주도하는 SBIR 프로그램은 성숙 단계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달 착륙선 제조기업 iSpace, 우주쓰레기 제거 기업 Astroscale, SAR 위성 서비스 기업 Synspective와 QPS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최종 단계에 선정되었다. 중소기업의 대출을 50%까지 보증해 주는 SMRJ 프로그램 또한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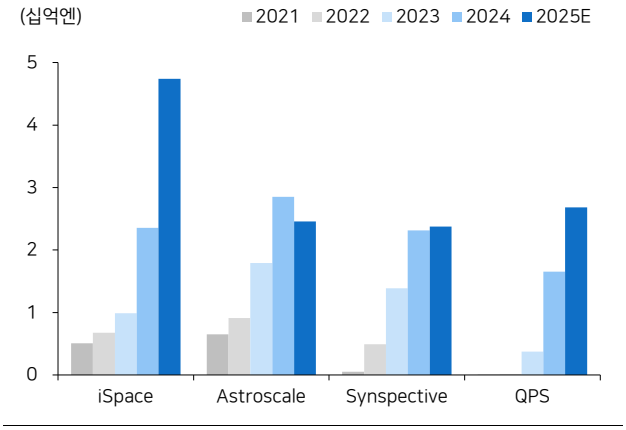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장려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역시 시행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의 J-Startup 프로그램은 보조금 우대 및 절차 간소화, 규제 샌드박스 시스템 활용, 규정 관련 요청 처리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 현재 12개 이상의 우주 기업들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내각부의 핵심 및 첨단 기술 연구개발 프로그램, K 프로그램은 일본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를 지원한다. 2025년에는 궤도 상 연료 재충전 및 수명 연장 기술에 120억엔을 할당했다. 이런 프로그램들의 지원을 받아 성장한 민간 기업들의 성공과 세계화에 따라 미국과의 상업 우주 동맹이 견고해지고 있다.

표1 일본 민간 우주 산업 지원 정책 현황

구분	내용
우주 전략 기금	10년간 1조엔 이상을 투입해 일본 우주 시장 규모를 4조엔에서 8조엔으로 확장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R&D 예산 우선 배정, 연구 성과를 정부 조달이나 사업화로 연결
NEDO (일본 국립연구개발법인)	우주 산업의 민간 주도 전환을 위해 딥테크 스타트업의 우주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SMRJ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정부 산하 중소기업 육성 전문 기관. 최대 50% 대출 보증, VC 펀드 출자 등 금융 지원 제공
J-Startup	글로벌 유니콘 육성 프로젝트. 보조금 지급 우대 조치 및 절차 간소화, 규제 샌드박스 활용
K-Program	우주, 해양 등 핵심 분야의 첨단 기술 확보를 위한 중요 기술 연구 개발 촉진 프로그램

자료: JAXA,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일본 민간 우주 기업 연도별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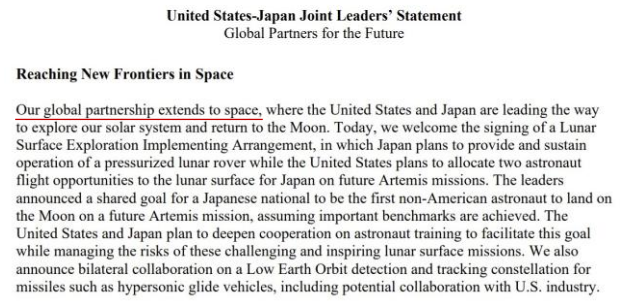
주: 회계연도 기준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과거 한 쪽이 우위를 지니던 미국과 일본의 우주 관계와 달리, 최근 양국은 상호 보완적인 역량을 추구하고 있다. 현재 미국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발사체, 위성 버스, 유인 서비스에 진입하기보다 일본은 탐사선, 차세대 우주정거장 등에 두각을 보인다. 2030년 퇴역을 앞둔 국제우주정거장을 대체할 사업으로 민간 저궤도 우주정거장(CLD) 프로그램이 추진 중인 가운데, 일본 민간 기업들은 스타랩, 액시엄 스테이션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협력, 지분 및 합작 투자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안보와 핵심 프로젝트에서까지 협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이든은 기시다 총리와 '미래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해당 성명을 통해 미국의 우주 물체 추적 회사와 일본의 SAR 기업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우주 영역 인식(SSA) 능력을 극대화한다. 또한 달 궤도 우주 정거장, 탐사 로버, 인프라 구축 등 달 정복이라는 미국의 핵심 프로젝트에서 일본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례로, 세계 최초의 비 미국인 달 착륙자로 일본인 우주비행사 두 명이 선정됐다. 이제 일본 민간 기업들은 단순히 미국 발사체 기업 수요에 기여하는 상업적 관계에서 벗어나 국가간 협력의 연결고리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이 우주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민간 생태계를 구축한 것처럼 대한민국 역시 민간 기업 육성을 준비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내 우주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우주항공기본법' 제정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연구 개발을 비롯해 모든 우주 산업 활동의 법적 기반이 될 전망이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게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과 '우주개발진흥법'을 통합해 새로운 '우주항공산업진흥법'으로 전면 개정할 예정이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연구 개발 보조금 방식에서 구매 계약 방식으로 전환하며 기업의 매출 보장이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스타트업 육성과 민간 전용 발사장 구축 등의 노력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4 미래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 공동 성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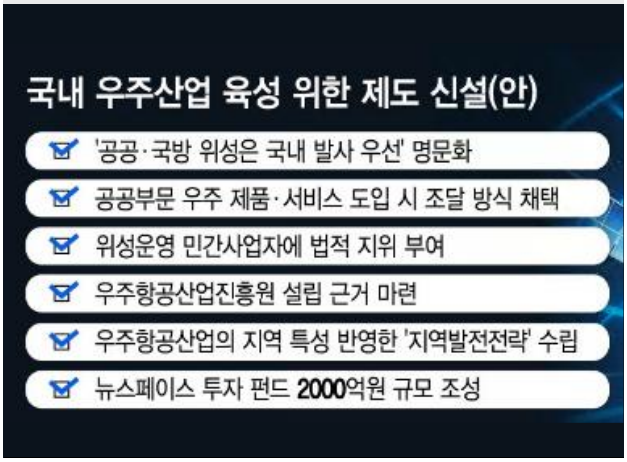
United States-Japan Joint Leaders' Statement
Global Partners for the Future

Reaching New Frontiers in Space

Our global partnership extends to space, where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re leading the way to explore our solar system and return to the Moon. Today, we welcome the signing of a Lunar Surface Exploration Implementing Arrangement, in which Japan plans to provide and sustain operation of a pressurized lunar rover while the United States plans to allocate two astronaut flight opportunities to the lunar surface for Japan on future Artemis missions. The leaders announced a shared goal for a Japanese national to be the first non-American astronaut to land on the Moon on a future Artemis mission, assuming important benchmarks are achieved. The United States and Japan plan to deepen cooperation on astronaut training to facilitate this goal while managing the risks of these challenging and inspiring lunar surface missions. We also announce bilateral collaboration on a Low Earth Orbit detection and tracking constellation for missiles such as hypersonic glide vehicles, including potential collaboration with U.S. industry.

자료: 일본 외무성

표2 국내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신설



자료: 우주항공청

원문: *Japanese commercial firms as drivers of Japanese space policy (The Space Review)*